



#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시사점

# CONTENTS

## 목 차

요 약	1
<hr/>	
I. 그리스 조기총선 결과 및 현지 반응	3
<hr/>	
3   1. 조기총선 결과	
6   2. 그리스 및 유럽 현지 반응	
II. 그리스 경제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8
<hr/>	
8   1. 그리스 경제현황	
10   2. 정권 교체에 따른 그렉시트 가능성	
12   3. 향후 경제정책 방향	
III. EU 정책 방향 및 2015년 경제 현안	16
<hr/>	
16   1. 그렉시트 관련 EU 입장	
18   2. 2015년 EU 주요 경제 현안	
IV. 한-그리스, 한-EU 교역에의 영향	20
<hr/>	
20   1. 한-그리스 간 교역 전망 및 시사점	
22   2. 한-EU 간 교역 전망 및 시사점	

## 요 약

유럽 재정위기의 시발점을 제공한 그리스에서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극좌 세력이 승리하면서 그리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로 긴축재정을 완화하려는 그리스와 채권단인 트로이카(EU집행위, 유럽중앙은행, IMF)간 충돌이 불가피하나, 유로존 탈퇴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실시된 조기총선 결과, 트로이카 주도의 긴축재정에 반기를 든 급진좌파연합(SYRIZA)의 승리로 앞으로의 행보에 변화가 예상된다. 1974년 군부 독재 종료 이후 정권을 나눠 가진 보수우파 정당과 중도좌파 정당을 제치고 SYRIZA가 압승해 제1당으로 부상했다. SYRIZA는 총 득표율 36.3%로 총선 승리당에게 몰아주는 비례대표 50석을 합해 전체 의석 300석 중 149석을 확보했다. 향후 SYRIZA는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다른 정당과의 연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채권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구제금융 상환 등 긴축재정 조건 완화를 위해 재협상을 비롯한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사실 선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급진좌파세력의 승리가 점쳐졌다. 지난 7년간 계속된 경제위기로 좌절감에 빠진 그리스 국민들이 긴축조치 대신 부채감면, 해고 공무원 복직, 최저임금 및 연금 인상 등의 공약을 내세운 SYRIZA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SYRIZA의 집권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부상하면서 2012년에 이어 그렉시트(Grexit)의 공포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확산되는 가운데, 긴축정책과 관련된 그리스와 채권단(트로이카)간의 재협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지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연립정부는 과거 정부가 채권단과 협의한 긴축조치 대신 부채감면, 공무원 구조조정 취소,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요구하며 재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독일과 트로이카측은 “그리스 부채감면 협상은 없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어 양측이 극단적인 대립에 직면할지 아니면 합일점을 찾아 타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스와 채권단간 협상이 불발되면 그리스는 다시 한 번 디폴트 위기에 빠지게 되어 유럽은 물론 세계 경제가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SYRIZA가 어렵게 잡은 정권이 붕괴될 수 있고, 트로이카는 그리스의 경제 불안이 유로존에 확산되는 것은 물론 유로존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대립 대신 합일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국내외 여론에서 우려하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 전 여러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그리스 국민의 75%가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요약

유로존 탈퇴에 따른 국가부도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이나 급진좌파연합의 총선 승리로 그리스 경제는 당분간 혼돈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 조세제도 및 노동법 개편 등의 이슈에 대한 新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경제 전반은 물론 관련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현지 반응을 요약하면 정권 교체에 따른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한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으로 한-그리스, 나아가 한-EU간 교역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기업의 對그리스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선박의 경우 대다수의 그리스 선사들이 파나마 등 해외에 편의치적을 하고 있어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합성수지, 석유화학 합성원료, 축전지 등의 주력수출품에 대한 영향 역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휴대폰, 가전제품 등 일부 소비재는 내수시장 위축으로 당분간 수입이 감소 혹은 보험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EU와의 교역에도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2014년에 비로소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나타낸 EU 시장에서 최근 한국이 수출 면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13.2%)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에게는 재정위기 기간 동안의 부진을 씻을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발표된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리스 정권교체로 2015년 상반기 등 단기간 동안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ICT 프로젝트, 국영자산 민영화, 저가 유망매물 증가 등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만큼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남유럽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또한 EU로의 수출은 기회복세와 발효 4년 차로 접어든 한-EU FTA를 십분 활용하여 수출 확대를 모색할 시점이다.

# I 그리스 조기총선 결과 및 현지 반응

## 1. 조기총선 결과

### □ 투표 결과

- 1.25(일) 실시된 조기총선 결과, 급진좌파연합(SYRIZA)은 현 여당인 신민주당(New Democracy:ND)을 8% 이상 큰 차이로 따돌리고 마침내 제 1당으로 부상
  - 투표 종료 직후 결과 예측에 따르면 급진좌파연합(SYRIZA)은 36.3%의 득표를 기록하며 총 의석수 300석 중 149석을 확보
  - 이전 집권당(ND)은 27.8%의 득표에 그쳐 76석 확보
- 이로써, 급진좌파연합(SYRIZA)은 정부 구성에 필요한 과반의석 151석을 채우기 위해 독립그리스당(AN.EL) 등 타 당과 협력해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할 예정
  - \* 그리스는 총선에서 승리한 제 1당에게 비례대표 50석을 몰아주기 때문에 제 1당은 실제 획득한 의석수 99석에 50석을 추가로 확보하게 됨.

<정당별 예상득표율 및 의석 수>

당 로고	정당	당수	득표율(%)	의석수
	급진좌파연합 (SYRIZA)	Alexis Tsipras	36.34	149
	신민주당 (ND)	Antonis Samaras	27.81	76
	황금새벽당 (XA)	Nikolaos Michaloliakos	6.28	17
	포타미 (POTAMI)	Starvos Theodorakis	6.05	17
	공산당 (KKE)	Dimitris Koutsoumpas	5.47	15
	독립그리스당 (AN.EL)	Panos Kammenos	4.75	13
	사회당 (PASOK)	Evangelos Venizelos	4.68	13
	기타	-	8.62	0
	합 계		100	300

## □ 선거 결과분석

### ○ 극좌파 세력 최초 집권

- '74 군부 독재 종료 후 41년 만에 처음으로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집권에 성공
- 지금까지는 보수우파인 신민주당(ND), 중도좌파인 사회당(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PASOK) 등이 번갈아가면서 집권함.

### ○ 긴축에 대한 피로감 누적의 결과

- '08년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지속된 긴축조치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지난 6년간 그리스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채권단 트로이카(EU집행위, ECB, IMF)에서 요구한 각종 세금인상, 연금삭감 등 긴축정책이 계속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감.

### ○ SYRIZA, 채권단과의 재협상 주장

- 급진좌파연합(SYRIZA)은 “더 이상의 긴축은 없다” 며 트로이카와의 재협상을 기치로 정권 교체에 성공
- 긴축정책 대신 재정책확장 정책을 통한 경기부양 내세워 민심을 얻는데 성공

### ○ 정치 포퓰리즘의 재탕 우려

- 일각에서는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정치 포퓰리즘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다시 선택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
- 실제로 급진좌파연합(SYRIZA)에서 내건 주요 공약은 해고공무원 복직, 최저임금 및 연금 인상, 건축세 폐지 등으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함.

<현 집권당과 Syriza간 입장 비교>

분야	이슈	급진좌파연합(SYRIZA)	신민주당(ND)
정치	공공 기관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T(구 국영방송사) 등 이전 공공기관에서 해고된 공무원 재고용</li> <li>- 정부부처를 10개로 축소·합병(현행 18개)</li> <li>- 기발주 공공프로젝트 지속 추진(지하철, ICT 인프라 등)</li> <li>- 지역 동사무소 인프라 및 편의 개선</li> <li>- 공공기관 기관장 5년 임기 보장으로 업무의 연속성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신규 평가 시스템 도입</li> <li>- 공무원 징계제도 개선</li> <li>- 공공기관에 신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 추진</li> <li>- 지역 동사무소 인프라 및 편의 개선</li> <li>- 단일 시험제도(ASEP)로 공무원 채용 제도 투명성 제고</li> </ul>
	공공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공공부채 부분탕감 추진</li> <li>- 'Grace Period'<sup>1)</sup> 도입 후 현 공공부채 및 이자상환 기간을 연장</li> <li>- 유로존 성장·안정성 협약인 GDP 대비 재정적자 3% 유지조건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부채 및 이자상환 시 저금리 상환 유지</li> <li>- 현재 부채 상환기간 유지</li> </ul>
경제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I(전력공사) 등 주요 에너지·통신 기관 민영화 추진 시 최소한의 국가지분 유지를 통해 안전장치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민영화 계획 지속 추진 ('14.12월 기준 77억 유로 민영화 딜 성사)</li> </ul>
	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부동산세(ENFIA) 폐지</li> <li>- 연소득 12,000€ 이하 소득세 면제</li> <li>- 금융자산 등에 대한 신규 징세 추진</li> <li>-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23%, 13%에서 5%, 9%, 19%로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新부동산세(ENFIA)를 1%로 축소(현행 1.43%)</li> <li>- 최고구간 소득세 42%로 축소(현행 45%)</li> <li>- 법인세 15% 축소(현행 26%)</li> <li>- 부가가치세(VAT) 축소 검토</li> </ul>
사회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수당 등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재구축</li> <li>- 대량해고 및 불공정 해고 규정 폐지</li> <li>- 신규 일자리 창출 추진(30만개)</li> <li>- 월 최저 임금 상향조정 (현행 586€ → 751€)</li> <li>- 근로자 대상 성탄절 보너스 회복 및 연금 수급자도 700€ 한도 내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까지 77만개 일자리 창출 추진</li> <li>-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비용 5% 인하</li> <li>- 공공·민간 노조의 파업 결의 요건을 강화하는 新노동조합법 제정</li> <li>-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개혁 지속 추진</li> </ul>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운영 1차 소형 의료 진단센터 확충으로 대형병원 혼잡 해소</li> <li>-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의료검진 제도 실시</li> <li>- 의약품 가격 통제제도를 통한 의약품 가격 인하</li> <li>- 전 국립병원의 개편을 통한 보건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운영 1차 소형 의료 진단센터 확충해 대형병원 혼잡 해소</li> <li>- 의약품 처방 시 투명한 절차를 통한 의료보험 부정수급 방지</li> <li>- 의료비용 교차 확인 시스템 구축</li> <li>- 실업자용 '건강 바우처' 제공</li> </ul>

## 2. 그리스 및 유럽 현지 반응

### □ 그리스 업계/전문가 반응

- Petropoulos S.A.(자동차부품 수입)
  -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집권하더라도 기존 그리스 정부의 노선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며,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자동차 시장은 2~3개월 정도 위축되다가 곧 회복되고, '15년 내수시장은 전년 대비 소폭 위축될 전망
- Intracom Telecom S.A.(ICT 제조)
  - 그렉시트(Grexit)<sup>2)</sup>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단, 정권교체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으로 각종 프로젝트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임.
  - ICT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트로이카와의 협상 지연 시 단기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 MIE Co. Ltd.(선박부품 수입)
  -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번 정권교체가 선박부품 산업에 끼치는 영향 역시 아주 미미할 것으로 전망
- Meidanis Sofos Tires. S.A.(타이어 수입)
  - 드라크마화<sup>3)</sup>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며, 이번 급진좌파연합(SYRIZA)의 승리로 채권단의 그리스에 대한 긴축조치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단기간의 정치 불안에 따라 자동차 타이어 시장은 2~6개월간 위축되었다가 완만한 회복세로 이어질 전망
- Hellenic Exchanges Group(증권거래소)
  - '15년 그리스 주식시장은 정치적 리스크 증가로 약세가 지속되어 회복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정권이 안정될 때까지 경기 위축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그렉시트 논란은 현실성이 떨어짐.

---

1) 그리스 경제가 가시적인 회복을 보일 때까지 국가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

2) Greece와 Exit의 합성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일컫는 신조어

3) 유로화 도입 전 사용된 그리스 통화

- IOBE(경제연구소)
  - 정권교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겠으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16년을 기점으로 그리스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나. 유럽 현지 반응

- EU 의회, 新그리스 정부에 대해 협약 준수 촉구
  - (의회 내 사회주의파) 양측 간의 이해관계조정을 통한 절충안 제안
  - (불만(Udo Bullmann) 유럽의회 사민당 의원) 그리스와 EU 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 EU는 현 對그리스 이자율 3%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주요 금융기관 반응
  - ECB : 對그리스 부채탕감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자체 참여는 불가
  - Commerzbank : 일시적인 불확실성은 있으나 그리스는 EU와 결국 합의에 이를 것, 이는 현재 이미 계획된 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EU 역시 합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
- 유럽 주요 인사 반응
  -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 총리 : “그리스 선거 결과는 유럽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할 것이다”
  - 빌트(Carl Bildt) 전 스웨덴 총리 : “그리스 SYRIZA는 유럽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그리스에 납부할 것이라는 공약을 절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상당히 대담하다”
  - 프리드리히(Hans Peter Friedrich) 독일 기민당 부총재 : “그리스는 긴축정책을 포기하면 안되며 그리스 국민들은 독일 납세자들에게 문제를 떠맡기면 안된다”

## II 그리스 경제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 1. 그리스 경제현황

#### □ 2015년 경제전망

- (GDP) '15년, 7년 만에 플러스 성장 기대
  - '10년 재정위기 발발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가 '15년을 기점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 3.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그러나 총선 이후 정국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기업투자 위축 등 실물경기 둔화로 성장률이 소폭 감소할 수 있음.
- (재정건전성)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는 감소세
  - 재정적자는 GDP 대비 0.2%로 예상되면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구제금융 졸업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
  - 공공부채는 '14년 GDP 대비 177.7%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으나, '15년에는 171.4%로 6% 이상 감소할 전망
- (실업률) 완만한 감소세 전망
  - 최근 관광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14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24.5%, '15년 실업률은 22.6%로 전망됨.
  - 그러나 고실업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단기 간에 소비심리 회복은 어려운 상황
    - \* '14년 스페인 24.0%, 크로아티아 16.7%, EU는 10.0% 실업률 기록
- (물가상승률) 디플레이션 회복세 기대
  - 수년 동안의 경기침체로 물가 하락세가 계속되었으나 최근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15년에 물가상승률은 0.3%로 전망
  - 실제 실물경기 회복 시까지는 최소 3~5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임.

<최근 경제지표 동향>

(단위: 억 유로,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7.1	-6.4	-3.6	-1.9	3.3
재정적자	10.1	8.6	12.2	1.3	0.2
공공부채	171.3	156.9	174.9	177.7	171.4
실업률	17.9	24.4	27.5	24.5	22.6
물가상승률	3.3	1.5	-0.9	-1.3	0.3

자료원: Eurostat, \*는 예상치

□ 구제금융 및 긴축재정 실시 현황

- 그리스는 '10년 재정위기 이후 채권단인 트로이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447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약속받음.
  - '15.1월 기준 181억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원되었으며, '15년 상반기 중 잔여분 수령 예정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현황>

(단위: 억 유로)

구분	유로존	EFSF(ECB)	IMF	계
1차 구제금융 지원분	529	-	201	730
2차 구제금융 지원분	-	1,419	117	1,536
잔액	-	18	163	181
계	529	1,437	481	2,447

자료원: IMF,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und:유럽재정안정기금)

- '12.3월 그리스는 민간채권단의 손실부담 참가(PSD)로 인해 국채 2,050억 유로 중 53.5%를 탕감 받음.
  - 잔여분 31.5%(700억 유로)는 최대 30년 만기 국채로 교환 가능, 15%(300억 유로)는 직접대출로 지원받음.
  - '14년 11월 기준 그리스 공공부채는 3,180억에 달함.

## 2. 정권 교체에 따른 그렉시트 가능성

### 가. 유로존 탈퇴(그렉시트 현실화) 가능성

#### □ 유로존 탈퇴론자 주장

- 지난 7년간 이어진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침체, 기업도산, 실업률 증가, 연금삭감 등의 여파로 시위, 파업이 증가하는 등 사회불안히 가중되었다고 주장
- 심각한 관료주의, 정치권의 부정부패 등 심각한 내부 문제들로 인해 주변 채권국가들의 신뢰도 잃어가고 있음.
  - 그리스가 유로존에 계속 잔류하면서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받게 되면, 결국 ‘밀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 유로존 탈퇴론자들은 차라리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낫다는 입장

#### □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

- 新정부와 트로이카 간 긴축정책 재협상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경우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중단되어 재정부족으로 디폴트가 불가피
  - 디폴트 선언 후 그리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가동해 자국화폐화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유로존을 탈퇴하게 됨.
- 유로존의 탈퇴는 드라크마화로의 복귀를 의미하며, 이 경우 드라크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예상됨.
  - 드라크마화 평가절하를 통해 일부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꾀할 수 있으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비용이 상당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그리스는 제조업 비중이 전체 GDP의 5% 미만으로 자체 산업기반이 매우 미약해 상품의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
  - 유로존 탈퇴와 드라크마화의 급격한 가치 폭락으로 수입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 서민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고 교역은 급감할 전망

- 현재 그리스 국민의 75% 이상이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희박함.
- 급진좌파연합의 Tsipras 당수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15.1.13)에서 ‘유로화를 되돌릴 수는 없다’ 며 유로존 잔류를 지속적으로 천명한 바 있음.

## 나. 그리스 유로존 잔류

### □ 유로존 잔류론자 주장

- 유로존 탈퇴 시 뱅크런(Bank Run)<sup>4)</sup>, 초인플레이션, 기업의 줄도산, GDP 급감 등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
  - '12.3월 당시 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가 심화되자 뱅크런이 발생해 민간예금 568억 유로가 인출됨.
  - 이 경우, 수입물가 급상승으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침체를 불러와 실업률 증가 및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
- 드라크마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유로존 시중은행들의 막대한 손실 불가피
  - 민간채무의 디폴트가 잇달으면서 은행위기로 전이됨과 동시에 그리스 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대규모 손실이 명약관화함.
- 주변국의 금리가 치솟으면서 유로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인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로의 전염도 예상되며, 독일을 제외한 유로존 역내 경기위축 전망

### □ 유로존 잔류 가능성

- 대다수 그리스 국민들은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며, 유로존 잔류가 탈퇴보다 더 이득이라는 주장이 우세
- 유로존 탈퇴를 부르짖는 정당은 선거기간 중 반긴축 정서를 부추기고 있으나,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

4) 예금자들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 유로존에서 탈퇴하더라도 부채위기 개선 보장이 없으며, 탈퇴 시 화폐가치 급락에 따른 디폴트, 교역급감, 초인플레이션 등 대외적 제약요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유로존 탈퇴 관련 최근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날짜	여론조사 기관	유로존 잔류	유로존 탈퇴	기타
'12. 2. 20	GPO	77.2%	21.1%	1.7%
'13. 12. 1	KAPA	76.9%	16.7%	6.4%
'14. 1. 20	MRB	67.7%	25.5%	6.8%
'14. 5. 13	GPO	69.4%	28.2%	2.4%
'15. 1. 7	GPO	75.7%	22.3%	2.0%

자료원: 각 여론조사 기관 결과취합

### 3. 향후 경제정책 방향

#### □ 채권단과의 부채상환 재협상

-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이끄는 新정부는 우선 채권단 트로이카와의 재협상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 이전 정부와 채권단이 이미 합의한 긴축조치를 대거 수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당분간 채권단과의 재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됨.
- 최대 걸림돌인 국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정부는 채권단을 상대로 공공부채 부분담감을 추진할 예정
  - 그리스 경제가 안정적 회복을 보일 때까지 국가부채 원금, 이자 상환을 미루는 등 Grace Period 도입을 추진할 전망

#### □ 공공부문 개혁기조 변화

- 공무원 해고 완화, 해고공무원 재고용 등 공공기관 개혁의 속도를 늦추고, 공공기관 기관장의 5년 임기보장 등 업무의 연속성 추진
  - ERT(구 국영방송사) 등 이전 공공기관에서 해고된 공무원을 재고용하며, 삭감된 공무원의 각종 수당 인상 등을 추진할 전망

-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온 민영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전력, 가스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국가 지분 유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14.12월 기준 77억 유로의 민영화 딜이 성사되었으나 新정부에서 민영화에 제동을 걸 경우 민영화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 조세제도 개편

- 그리스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불만을 사게 된 조세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
- 新부동산세(ENFIA) 폐지, 연소득 12,000€ 이하 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23%, 13%에서 5%, 9%, 19%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 고용 관련 정책

- 트로이카에서 요구한 해고 관련 규정 폐지로 노동자 권리 강화 모색
- 대량해고 및 불공정 해고 관련 규정 폐지 추진
- 최저임금 조정, 각종 수당 재도입으로 구매력 개선 추진
- 월 최저임금을 현행 586€에서 751€로 상향조정하고 성탄절, 부활절 법정 보너스 회복은 물론 연금 수급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 기타

-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기존에 추진된 지하철, ICT 등 공공프로젝트 등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
- 경제 안정을 위해 SOC 관련 프로젝트는 계속 추진하는 한편 30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추진

#### □ 향후 전망

- 현실적으로 상당수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新정부와 채권단 간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공약이 수정될 가능성은 상존
- 트로이카 역시 기존의 긴축재정 및 부채상환 조건을 협상 내용에 따라 일부 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현실적으로 급진좌파연합(SYRIZA)의 공약은 포퓰리즘에 가까우며 실현 가능성이 낮아 新정부의 장기 집권에 불안 요소 상존
  - 그리스 국민들은 공약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면서도 수구정당에 대한 누적된 불만으로 인해 기존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lt;쟁점사항별 채권단 요구와 現 그리스 상황 비교&gt;

쟁점사항	채권단 요구	現 그리스 상황
재정적자 0.2%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세금 채무조정 동결</li> <li>○ 퇴직연령 연장, 연금 삭감 추가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재정수지 흑자가 3%에 달해 추가긴축 불필요</li> </ul>
체납세금 100개월 분할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개월 분할상환은 과하며, 기간 축소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세금 100개월은 필요하며, 기 법안통과</li> </ul>
민간부채 일괄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자산 경매처분 요구</li> <li>○ 일괄적 부채탕감 반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 부동산 경매 제한</li> <li>○ 일괄적 부채탕감 요구</li> </ul>
국세청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청 개혁 지속 진행</li> <li>○ 정치적으로 독립성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까지의 개혁으로 충분함</li> </ul>
연금수령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수령연령 최소 67세 수정 및 최소근무경력 40년 이상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연금수령연령 65세 및 최소근무경력 37년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li> </ul>
최저임금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인상 반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임금 인상 필요 (현재 586 유로)</li> </ul>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산업 및 서비스업 동일한 부가가치세(VAT) 23%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형 카페, 식당에 대해 부가가치세(VAT) 13% 요구</li> </ul>
노동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량해고 가능토록 노동법 개정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당(PASOK) 반대로 법안 부결</li> </ul>
기업의 청산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청산절차 간소화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검토 필요</li> </ul>
공무원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및 공공기관 급여기준 통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 중</li> </ul>
공무원 추가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휴대폰비, 출장수당을 민간수준과 동일하게 수정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 중</li> </ul>
지출내역 평가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공공기관 지출내역 평가시스템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 중</li> </ul>
지자체 및 공공기관 신재정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재원마련 및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 중</li> </ul>
국영자산 민영화 및 공무원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영자산 민영화, 공무원 구조조정 조속한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구조조정은 총선 후 진행 예정</li> </ul>
분식통계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식통계 방지를 위한 통계청의 독립자문위원회 임기연장 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의 중</li> </ul>

III

## EU 의 정책 방향 및 2015년 경제 현안

### 1. 그렉시트 관련 EU 입장

#### 가. 그렉시트 가능성 및 여파

##### □ 그렉시트 가능성

- EU 집행위, 유럽 조약(European Treaty)에 의거해 EU가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탈퇴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
- 유럽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그렉시트 발생 가능성을 25~33%로 낮게 평가
  - \* 독일 Commerzbank, Berenberg Bank, 신용평가사 Standard & Poor's

##### □ 그렉시트 여파 예상

- 과거 그리스 통화인 드라크마로 회귀 시 2,400~2,6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금액이 상환되지 못할 전망
  - \* 독일인 1명당 약 690 유로, 프랑스인 1명당 약 735 유로 부담 발생
- Ifo 경제연구소는 그렉시트 발생 시 독일 정부의 손실 규모를 최대 760억 유로로 추정
- 독일정부는 '그렉시트에 따른 여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
  - EU와 ECB는 '12년 그리스의 채무탕감 당시와는 달리 대비책이 완비되었다고 판단
  - 유럽안정화기구(European Stability Mechanism: ESM)<sup>5)</sup>를 통해 긴급상황 발생시 최대 5,000억 유로 지원 가능
  - ECB는 대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15.1.22)하는 등 유로화 방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의지를 밝히고 있어, 금융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임.
  -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키프로스 등 다른 위기국의 경우 재정건전화를 위한 개혁이행 중

5) 재정위기에 처한 유로존 회원국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럽연합 상설 구제금융기구. '12년 10월 8일 공식 출범

- 보핑어(Peter Bofinger) 독일 경제자문에 따르면 그렉시트는 유로존 안정에 ‘매우 위협적’
  - 그리스가 구제금융 조기졸업 시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시장 내 불안감 확산 및 국채 금리 급등,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금 가격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이 예상됨.
    - \*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그리스의 대표 4개 은행 중 2곳만 자기자본비율(BIS) 기준을 통과
  - 유럽 금융계의 경우 그리스 통화인 드라크마화로 다시 거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나 이후 다른 국가들의 연쇄적인 유로존 탈퇴 등의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음.

## 나. 그렉시트 관련 반응 및 대책

### □ 그리스에 유로존 잔류 및 개혁 의지 촉구

- (EU) “그리스, 성장친화적 개혁 지속 필요”
  - 모스코비치(Moscovici) EU 경제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그리스에 개혁 기조 유지를 촉구하며 유로존 유지가 통화동행에서 중요하다는 입장
  - 미셸바흐(Michelbach) EU 의원은 “개혁을 이행하지 않아도 나머지 회원국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경고
- (독일 정부)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희망
  -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그리스 정부가 EU와의 협상을 준수하고, 긴축재정 및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촉구

### □ 對그리스 부채탕감 전망

- (EU 고위관계자) 그리스는 현재의 부채 부담에 대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채탕감은 불가피할 것
- 경제일간지 Handelsblatt지는 총 부채의 1/3에서 50% 정도의 부채탕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 현재 그리스의 총 채무는 약 3,200억 유로이며 이 중 공공 채권 비중이 80%

□ 그렉시트 관련 대책

- 유럽 일부 시중은행들은 그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해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에 처했던 '12년 당시 유로존 해체에 대비해 세웠던 대책을 내부적으로 재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비, 유럽 관련 사업 규모가 큰 골드만 삭스와 씨티그룹은 비상 계획을 수립 중
  - 아울러 그렉시트 실현 시 거래 시스템에 충격 여파 여부, 여신 노출 위험 점검 및 지급 시스템에 대한 충격 흡수에도 대비<sup>6)</sup>

다. 총선 결과에 따른 관련 對그리스 정책 방향

□ 기존 정책 기조 유지

- 쇼이블레(Wolfgang Schaeuble) 독일 재무부 장관은 “모든 신정부는 이전 정부가 맺은 계약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해야한다” 고 언급
  - 이 경우 독일은 그리스를 계속 지원할 것이나 그리스가 다른 선택을 할 경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對그리스 압박 강화

- ECB는 그리스에 대해 기존의 협약을 이행하도록 촉구
  - 신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제금융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경우 그리스 시중 은행에 대한 정기 자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

2. 2015년 EU 주요 경제 현안

□ 디플레이션 탈출 및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실시

- 유럽중앙은행(ECB), 양적완화 정책 발표

---

6) 2012년 여름, 그리스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시 유로존 붕괴 등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다국적기업들은 유로화 대금 즉시 환전, 거래/결제통화 변경, 대금지급 기일 축소, 현금 거래, 바터 거래 등의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결제통화 및 준거법 변경 조항을 매매/수출 계약서에 추가, 역외 담보 제공 조항 추가를 통해 유로존 역외의 달러 표시 자산을 담보로 설정 등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한 바 있음.

- 저유가와 그리스발 악재 등에 따른 유로존 디플레이션 현실화에 따라 1조 1,400억 유로의 양적완화 발표('15.1.22)
  - \* 유로존 물가상승률 추이 : ('09.7) -0.6% → ('11.9) 3% → ('14.12) -0.2%  
(자료원:Bloomberg)
- 오는 3월부터 '16.9월까지 매달 600억 유로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될 예정
- 라우텐셸레거(Sabine Lautenschlaeger) ECB 이사는 “ECB의 국채매입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것” 이라며, “대규모 국채매입은 각국 정부들이 더 많은 부채를 쌓게 유도할 수 있다” 고 언급하는 등 회의적인 의견 피력
- 양적완화 규모가 유로존 경기부양에 충분치 않다며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함.

□ 국가별 경제개혁 지속 추진 촉구

- 드라기(Mario Draghi)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15.1.18일 개최된 유럽 정상회의에서 국가별로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
  -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차질 없는 개혁 이행 및 재정지출 감축 등을 촉구
  - 반면, 독일에는 인프라 투자 및 내수 확대를 요청

□ 고실업 해소

- 실업률 고공행진을 긴축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가운데 EU 회원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단기간 내 해소가 어려운 상황
  - \* '14.11월 EU 실업자 수는 2,440만 명, 실업률은 10.0%(유로존 11.5%)
  - \* 독일 실업률은 6.5%(14.12월)로 통독 이후 최저 수준
  - \* '14.11월 기준 이탈리아 실업률 13.4%(청년실업률 43.9%), 그리스 실업률 25.7%, 스페인 실업률 23.8%로 최고 수준
- 융커(Jean-Claude Juncker) EU집행위원장은 유럽의 경쟁력 강화와 유럽 내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이라고 강조

## IV 한-그리스, 한-EU 교역에의 영향

### 1. 한-그리스 간 교역 전망 및 시사점

#### □ 한-그리스 교역 현황

- '14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수출의 경우 전년 대비 18.7% 증가한 10.5억 달러, 수입의 경우 51.1% 증가한 4.1억 달러 기록
  - '14년 수출증가는 '13년 선박수출이 급감한 기저효과<sup>7)</sup>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폭 증가
  - 수입은 석유류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나프타 수입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최근 지속 증가

#### <한-그리스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1,350	11.6	1,909	41.4	884	-53.7	1,049	18.7
수입	91	11.3	248	172.7	272	9.9	411	51.1
수지	1,259	-	1,660	24.2	611	-63.1	637	4.3

자료원 : 관세청

### 나. 2015년 교역 전망

- 정권교체 후 新정부가 안정될 때까지 한-그리스 간 교역은 소폭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新정부와 트로이카간의 재협상 진행 속도에 따라 新정부의 안정화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임.

7) 선박 수출은 선주로부터 수주 후 인도 시까지 약 3년이 소요됨. 유럽재정위기로 '11년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가 급감하면서 '13년 對그리스 선박 수출이 급감함. 이로 인해 '14년 선박 수출은 상대적으로 증가함.

- 對그리스 수출품목 중 선박이 전체의 80%를 차지
  - 대다수 그리스 선사들은 영국 등 해외에 편의치적<sup>8)</sup>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함.
- 그 외 주력수출 품목인 합성수지, 석유화학합성원료 등 산업용 제품 수출의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
  - 이들 제품군은 현지 수입상들이 가공 후 해외로 재수출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침체와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다만, 휴대폰, 가전제품 등 내수시장을 위해 수출되는 소비재 제품들의 경우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불확실성이 단기간 지속됨에 따라 현지 바이어들은 수입 대신 당분간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우리 기업의 그리스 투자는 현재까지 총 850만 달러(누적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큰 영향은 없을 전망

#### 다.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 그리스 기업과 거래시 대금지체 가능성에 유의
  - '15년 단기적으로는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현지 바이어들은 거래 후 즉시 현금을 지불하는 대신 대금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시 대금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바이어의 재무상태 사전 확인은 필수
  - 일부 바이어들의 경우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 대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 신규 바이어와 거래 희망 시 KOTRA의 지사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당 바이어의 재무상태 확인 후 거래 필요
- 저가 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
  - '15년 정국불안으로 야기된 경제혼돈이 지속되는 동안 유망 저가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인수합병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8) 선주가 세금과 선원, 안전규정 등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자신의 배를 등록하는 제도

## 2. 한-EU 간 교역 전망 및 시사점

### □ 한-EU 교역 현황

- EU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4대 교역 상대
  - '14년 한국의 對EU 수출은 약 517억 달러(8% 증가), 수입은 약 623억 달러(10.9% 증가)를 기록

#### <對EU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		증감		증감
수 출	49,421	△11.4	48,857	△1.1	51,674	8.0
수 입	50,395	6.2	56,230	11.6	62,341	10.9
수 지	△974	-	△7,373	-	△10,667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재정위기 여파에 따른 EU 경기부진으로 한-EU FTA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14년에는 완만한 경기회복을 계기로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냄.
  - 對EU 10대 수출국 중 8위인 한국이 13.2%로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 기록 (World Trade Atlas, '14.9월 기준)
    - \* 중국(1위, 9.7%), 미국(2위, 6.6%), 러시아(3위, -6.1%), 일본(6위, -1.3%), 터키(7위, 10.3%)

### □ 2015년 교역 전망

- '15년에는 그렉시트 우려에도 불구하고 EU 주요 회원국들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이에 따라 한국의 對EU수출도 전년을 소폭 상회하는 '15년 약 6% 증가할 전망
    - \* '14년 한국의 對EU 수출 +5.8%, '15년 EU 각 회원국이 일체 플러스 성장세 기대
    - \* EU 집행위, '17년까지 3,150억 유로 예산 고용, 성장 투자 확대를 위한 EU 프로그램 추진 발표('14.12월)
    - \* 유럽의회, '14~'20년간 총 1,809억 유로 예산 동유럽 인프라 개선에 투입 예정
  - 단, 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등의 영향으로 유로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유로화로 결제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가격경쟁력 약화 및 수익 악화 우려

- \* '15.4분기 환율 전망 : 1 유로=1.18 달러(ING)
- \* '17년에는 1 유로가 0.95 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Deutsche Bank, '14.10월)

□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 그리스 총선 결과, 긴축에 반대하는 정권이 집권하여 그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EU 경기악화로 이어져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그러나 그렉시트 가능성이 낮고, 발생하더라도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충격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 \* 그리스는 한국의 56대 수출국('14.11월 총 수출의 0.2%)
-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시 구제금융 지원은 지속될 전망
  - 총선 이후에도 시장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지속될 전망이나, 유럽경기회복세에 따른 완만한 EU 경제 성장 및 對EU 수출입 안정 등 긍정적 효과 예상
  - \* EU집행위, '15년 EU 경제성장률 1.5%, 유로존 0.7% 전망

□ 우리 기업에의 시사점

-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과 높은 환율 변동에 탄력적인 대응 필요
- 미국의 금리인상과 ECB의 양적완화로 유로화 약세가 강화될 경우, 유로화 결제 수출기업에 부정적인 영향
  - 반면, 미국 경기회복은 저유가와 더불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가능
  - 따라서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외국인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유치에 필요한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제구조 개혁과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대외 변수에 대한 내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임.

[참고] 그리스 급진좌파연합(SYRIZA)의 세부 경제정책

1.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정책 (18억 € 집행)

- 지속된 재정위기로 취약해진 사회적 인프라망 확충을 통해 긴급 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추진
  - 30만 가구에 달하는 빈곤층 대상 매월 300 kWh 한도 내 무료 전기 제공 (5,940만 €)
  -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교회와 연계하여 소득이 없는 30만 가구 대상 식비 지원 (756백만 €)
  - 빈곤층에서 30~70m<sup>2</sup> 소형 주택 구입 시 m<sup>2</sup>당 3€ 주택자금 지원, 초기 3만채 아파트 지원 (5,400만 €)
  - 1,262,920명의 연금수급자 대상 기 폐지된 성탄절 보너스 700€ 한도 내 재지급 (5억 4,300만 €)
  - 미보험 실업자 대상 무료 의료비 지원 (3억 5,000만 €)
  - 빈곤층 실업자 대상 특별 공공대중카드 지급 (1억 2,000만 €)
  - 연료용, 자동차용 디젤유 특별소비세 인상안 폐지 및 현 디젤유 가격을 리터당 1.2 €를 0.9 €로 인하

2. 경제재건 및 조세정의 촉진 (65억 € 집행)

- 세금부담 완화를 통한 가계부담 완화, 내수회복, 자금유동성 개선 등 경제재건 추진
  -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민간이 지고 있는 공과금 연체료 및 각종 부채의 84개월 분할 상환 추진 (30억 €)
  - 통합건물세(ENFIA) 즉각 폐지 및 신규 대형건물세 도입 (20억 €)
  - 연소득 12,000 € 미만 저소득층의 소득세 폐지 (15억 €)
  - 저소득층의 부실금융채권 개선을 통한 민간부채 부담 완화 및 공공개발은행 설립 (10억 €)
  - 최저임금을 현행 586 €에서 751 €로 인상

3. 고용 회복을 위한 국가 플랜 구축 (30억 € 집행)

- 민간·공공·사회 전 분야의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추진
  - 구제금융 협상 시 채권단 트로이카에서 요구해 폐지한 각종 노동자의 권리 회복

- 재정위기로 인해 폐지된 전국 민간·공공노조의 집단노동협약 조항 복구
- 재정위기 후 증가한 대량해고, 불공정 해고 및 용역 채용을 허가하는 관련 노동규정 철폐

#### 4. 정치시스템 변혁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

- 국가 제도개선을 통한 대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정치시스템 개선
  - 각 지자체의 투명성, 경제적 자주성, 효과적 운영 강화를 통해 직접 민주주의 강화 및 신민주주의 도입
  - 민주 시민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시민법헌장 제정, 시민거부권 제정, 필요시 시민 선거제안권 제정
  - 국회의원 면책특권 축소 및 민사상 불기소 규정 폐지를 통한 국회 시스템 개선
  -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사의 재무건전성, 납세의무, 사회 안전기준 등 각종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위해 관리 강화
  - 방만 경영으로 인해 현 정부가 폐지한 공영방송사 ERT 재설립



### 작성자

- ◆ 아테네무역관           우병일 과장
-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강환국 과장
- ◆ 선진시장팀            이연주 과장



## Global Market Report 15-008

### 그리스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발행인 | 김재홍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5년 1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Global Market Report